

광주송정역 철도 개통 100년



광주송정역이 오는 10월 1일이면 개통 100주년을 맞이한다. 사진은 현 송정역의 모습.

‘日 수탈통로’서 ‘호남물류기지’로 내년 KTX 호남선 개통 새 도약

2017년 복합환승센터 건립

내일 광산문화관서 기념식

광주·전남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광주송정역이 오는 10월 1일 개통 10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913년 10월 1일 문을 연 광주송정역(당시 송정리역)은 그때 송정리~목포 구간을 이었고, 이듬해 송정리~대전 구간을 연결하면서 호남선 철로를 완성시켰다.

◇탄생에 얹힌 애환의 역사=일제 강점기인 1913년 태어난 송정리역은 호남 교통의 중심으로, 광주·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탄생 배경에는 역사적 곡절이 숨겨져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 철로를 놓고 기차역을 만든 주체는 일본이었는데, 철도 설치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수탈창구에 대한 필요 때문이었다. 나주 등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목포까지 쉽게 이동해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탈통로’로 송정리역을 만들 것이다.

10년 후인 1922년 7월 1일 광주~송정리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주도 철도의 시대를 열게 된다.

◇교통수단 변화로 쇠퇴의 아픔 =‘잘나가던’ 송정역도 한때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교통수단의 변화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전국의 고속도로 망이 대폭 확충되면서 고속버스의 시대에 이어 자동차 1가구 1대 시대, 비행기 시대가 열렸다. 결국 기차는 교통 수단의 뒤틀림으로 밀려났다. 송정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호남선 개통에 맞춰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800억원이 투입돼 새 역사를 갖춘 복합환승센터도 건립된다. 대형마트와 호텔,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부지면적만 2만2000㎡에 이른다.

지난 2004년 호남고속철(KTX)이 개통되면서 서울~용산~송정역 소요시간이 4시간대에서 3시간이 내로 줄었다. 여기에 광주~지하철 1호선이 송정역과 광주를 연결하면서 접근성이 편리성도 높아졌다.

이후 매년 광주송정역 이용객 수가 150만명을 넘나들고 있다.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호남 교통·물류 중심지로 재도약=송정역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

요충지로 꿈한다. 광주~남평~화순~보성~순천~여수를 잇는 경전선의 길목 역할을 하고 있고, 광주지하철 1호선과 연결돼 있다.

또 광주~무안 고속도로, 나주~장성간 국지도 49호선, 나주~호남고속도로를 잇는 국도 13호선이 송정역 앞뒤를 관통하고 있다. 여기에 영광으로 가는 도로는 서해안으로 연결돼 있고, 바로 옆에는 광주공항도 위치하고 있다.

송정역은 2014년 KTX 호남선 완전 개통도 앞두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93분, 인천 공항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호남선 개통에 맞춰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800억원이 투입돼 새 역사를 갖춘 복합환승센터도 건립된다. 대형마트와 호텔,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부지면적만 2만2000㎡에 이른다.

광주시 김집중 교통정책 과장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호남권 교통·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송정역 철도개통 100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 국회의원, 각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로운 기념식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

‘무리한 입법’이냐 ‘지방자치 훼손’이냐

대법 “광주시의회 지방공기업사장 인사검증 조례 무효”

단체장 인사권 관행 제동… 시의회 “시민 알권리 무시”

대법원이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엇따라 제동을 걸면서 시의회의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훼손’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광주시의회가 제의한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기한 시조례안 제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리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을 포함하도록 한 광주시의회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안행부(옛 행안부)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이라고 판단,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좌우지우했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의 관행은 당분간 제동이 힘들게 됐다.

시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측근 기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

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결국 협행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조례 제정 당시부터 관련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이번 조례가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상위법의 입법불비(立法不備)에 따른 불가피한 판단으로 여겨진다”며 “본질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 보호’가 ‘시민의 알권리 및 공개적인 자질검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사안도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3년째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제도적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대법원은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대법원은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취안저우시·요코하마

문화도시 교류 본격 추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체결 실무회담 조속 개최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한국의 광주시, 일본 요코하마시, 중국 취안저우시 등 3개 도시간 문화교류 행사가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광주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회의에서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속협의서(이하 부속협의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속히 실무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3개 도시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속협의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부장, 시모무라 하루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광주에서 쟁재한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광주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한 약속이다. 이 합의문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비롯해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중국 전청중 취안저우 부시장, 일본 하야시 우미코 요코하마 시장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회의에서 체결한 부속협의서에는 ▲도시간 문화예술교류 ▲죽재·공연, 전시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한·중·일 예술제 및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교육 주간 교류행사 공동참여 ▲동아시아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등이 담겨 있다.

광주시는 부속협의서와 관련, 내년에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



지난 2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중국의 차이우(蔡武) 문화부부장(오른쪽), 일본의 시모무라 하루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대신이 공동협의문에 서명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에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인형극의 제작, 예술 교류, 정통성 국제 음악제의 일본·중국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가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당당을 알리고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만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은 도난하거나 악랄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며 “어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진룡 “부석사 불상 반환…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논란이 빚어진 자신의 ‘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언급’과 관련해 “한국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

느 나라나) 똑같다”며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상은 1330년에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을 사에 안치돼 있던 중 지난해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됐고, 한국 법원은 지난 2월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장관은 “다만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은 도난하거나 악랄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며 “어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 문의전화: 010-7510-2000

신협대출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낙지 |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 가능!
- 특례보증 | 햅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원광신협

| 궁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1. 참여대상

-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로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복용시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30mmHg / 80mmHg 이상에서 180mmHg / 110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중성지방 400mg/dl 미만이신 분
- 또는 그 외 진료를 통해 기타 조건이 만족되시는 분

2.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혈액 및 노검사 / 신체검사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혈압 검사
-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제공 / 정규 방문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 기간 및 방문횟수

선별검사로부터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총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회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참여 기간 및 방문 횟수 변경됨).

4. 연구기관 : 국내 주요 종합병원

5. 연락처 : 본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상담원(콜센터) 연락처 : 070-4495-1096